



보도 일시	2022. 10. 12.(수) 11:30	배포 일시	2022. 10. 12.(수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장 김명선 (044-215-491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도경 (dkim7258@korea.kr)

‘22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
-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논의 -

□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는 10.12(목) 9시반에 ‘22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*을 개최하였음(주최: 기재부, 주관: STEPI)

*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'19년부터 신설되어 운영중

○ 지난 1·2차 포럼*에 이어 금일 개최된 3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음

* 제1차 미래전략포럼(3.31): 대학 및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방안

제2차 미래전략포럼(4.28): 기술사업화 활성화방안, 사내대학·비정형학위 활성화방안

□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‘기술지정학 시대의 안보전략; 반도체 공급망 재편 사례로 본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’을 주제로 발표하였음

○ 윤 위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강화와 기술보호주의의 부상이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분업구조*를 해체하고 있으며, 특히 ‘21년 반도체 공급대란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하였음을 지적하였음

*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효율성에 기반해 글로벌 분업구조를 형성해왔으며, 전세계 120여개국이 반도체 시장의 수출입에 관여

- 아울러 미국의 ‘반도체 부흥’과 중국의 ‘반도체 굴기’ 등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

○ 윤 위원은 기술 주권과 반도체 안보를 강화하려면 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‘한국형 반도체 방패’*를 확보하고, ②독자적 추격이 어려운 취약 부문(팹리스, 소부장 역량 등)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는 한편,

- ③GVC(Global Value Chain)-RVC(Regional)-TVC(Trusted)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복합적 선택지** 탐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

* 압도적 경쟁우위를 보유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(메모리 반도체 등)

** (예) 핵심파트너십 협력, 아세안 등 역내 RVC 구축, 안보적 민감성이 적은 품목은 GVC 유지 등

□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‘한국형 경제안보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향’을 주제로 발표하였음

○ 김 교수는 최근 대외환경 변화의 특징을 ①경제-안보 불가분 시대의 도래, ②세계경제질서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이동, ③보호주의 진영화 등으로 진단하였음

-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반도체지원법, 인플레이감축법,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안보 조치들은 향후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,

- 개별 현안에 단편적·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

○ ‘한국형 경제안보전략’은 SWOT 분석*에 기반하여 국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-안보 연계를 추진하여야 하며,

* S(강점) : 제조·ICT 강국, 우수한 혁신역량, 소프트 파워, W(약점) : 높은 자원·시장의 해외의존도, T(위협) : 중국의 맹추격, O(기회) :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 등

- 품목별로 GVC(Global), RVC(Regional), DVC(Domestic), TVC(Trusted) 등에 분산 배치*하여 입체적 공급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
* (예) GVC : 섬유·의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, RVC : 자동차 등 탈탄소화 품목 등,

DVC : 반도체·배터리 등 내재화 가능한 품목, TVC : 핵심광물 등 내재화 곤란한 품목

□ 오늘 포럼을 포함하여 앞으로 개최될 미래전략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에 참고할 계획임

※ 본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,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